

김오수 前 법무차관 자격 안되고, 김영란 前 대법관 고사... '1호 공수처장' 이들 뜬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이 7일 사법평가위원회에서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처장' 인선의 밑그림을 그린다.

1호 공수처장 조건은

변협은 이날 두 자릿수 안팎으로 추려진 공수처장 후보들에 대한 평판 등을 점검하고 후보 추천 명단을 정리한다. 이후 6월 초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후보 4명을 선정해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추천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변협 회의는 사실상 공수처장 인선의 '밑그림'이 될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공수처장은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추천위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이 관건이다. 추천위엔 여당 추천 인사 2명과 여당이 아닌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리고 변협회장과 법무부 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이 포함돼 있다. 야권의 동의를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성향이 뚜렷한 이는 추천위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아닌 이찬희 변협 회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 추천위 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구조”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면 변협에서 추천하는 후보자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공수처장의 조건은 ‘만65세 미만, 판·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상’이다. 이러한 조건을 통과해야 함과 동시에 정권의 개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만한 상징성과 전문성, 야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하는 만큼 극히 좁은 후보군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준비단장 위촉식에 참석해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공수처 사무실은 법원과 검찰이 자리한 서초동에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지난 공수처설립준비단(준비단)과 자문위 회의에서는 “영장 발부 문제도 있는 만큼, 공수처 사무실은 서울중앙지법 근처에 얻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1호 공수처장...누가 언급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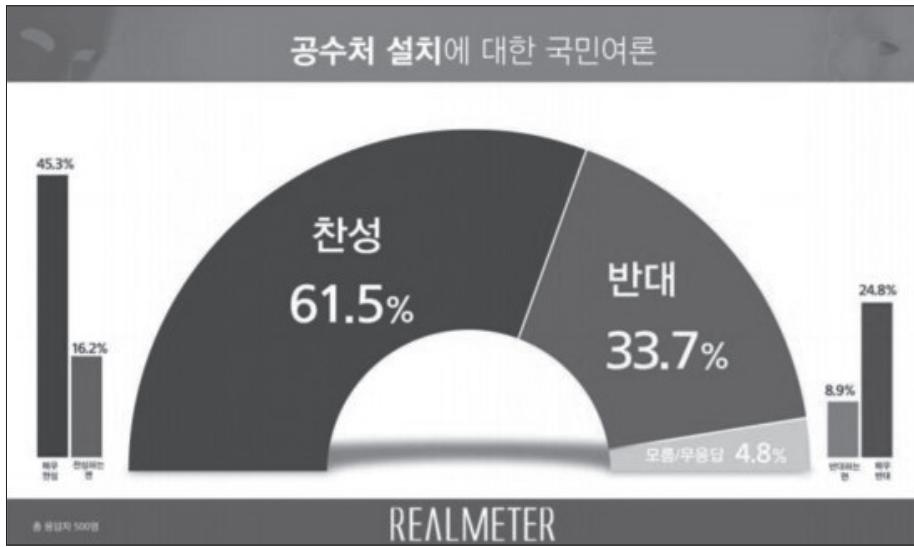
후보군으로는 검찰 출신인 신현수(62·사법연수원 16기)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변호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57·19기) 감사원 감사위원,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특별검사로서 수사한 판사 출신 이광범(61·13기) 법무법인 LKB 변호사 등이 언급된다.

신현수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을 보좌하는 사정비서관을,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때 법무장관 후보 및 민정수석 후보로 거론되다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돼 ‘국정원 개혁’을 이끌었다.

민변 부회장 출신의 김진국 감사위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비서관을 맡았고 노 전 대통령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시절 근무했던 법무법인 해마루의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김경수 경남지사·조국 전 장관 부부·이재명 경기도지사·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 등 주요 형사 사건을 도맡은 이광범 변호사는 지난달 ‘대표’라는 공식 직함에서 내려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공수처장 인선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열린 준비단 2차 회의에서는 ‘비검찰 출신 여성 법조인’이 적합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시돼 김영란 前 대법관(64·11기)과 이정미 前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8·16기)등이 거론됐으나 이들은 사실상 고사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 설치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전반을 이끌다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이용구(56·23기) 前 법무부 법무실장은 사실상 공수처의 ‘실권’을 갖고 있는 차장에 낙점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이 전 실장은 최근 법무실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인들에게 지난 3년 동안 쌓인 업무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만 해도 차장 자리에 '국정농단특검'의 박영수(68·10기) 특검과 김오수(57·20기)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히 거론됐다. 하지만 박 특검은 연령제한(65세)에, 김 전 차관은 검사 퇴직 기한(3년)에 부합하지 않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공수처 출범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다양하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적어도

검사에 대한 견제는 확실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 현직 검사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사나 판사의 사건 처리에 동의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직권남용’으로 판·검사를 고발하는 경우도 대폭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반드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1호 대상이 윤 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번 펼쳐왔다.

(출처/중앙일보)